



3면

"전북 미래, 4차원 경영 필요"

전주매일

2024년 7월 5일 금요일 (음 5월 30일) 제353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4일 정읍 JB금융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식을 갖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호남 3개 지자체, 지역발전 동행 출발

정읍서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

전북자치도·광주광역시·전남도,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
광역SOC·산업 등 경제분야 중심의 호남권 상호 협력 다짐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호남권의 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선 8기에 들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정읍 JB금융 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7년 만에 열린 의미있는 만남으로 기존의 전 분야에 걸쳐 협력과제를 발굴·보고하는 방식이 아닌 경제·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세밀하게 상호협력관계를 다짐하고자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3개 시·도지사는 전국적인 초광역 메가시티 공론화 흐름 속에서 지역소멸의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결성하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선언문에는 3개 시·도간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경제동맹의 핵심인 재생에너지·이차전지·바이오·

모빌리티 등 산업 분야 신규사업 발굴·협력, 지방소멸 및 지방재정 위기 극복, 동학농민혁명 선양 및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호남권 정체성 확보,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위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특별법 제·개정 등 입법 및 국가 예산 확보에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호남권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고속도로 남북 2축·3축·4축 노선 중 북에 따라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고속도로 접근이 취약한 지역이 발생하고 있어 노선 신설 및 조정 등 건의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중복구간 및 지·정체 구간 해소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6월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열고 정책협의회의 기존 협력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과 새로운 공동협력체계 구축방안을 협의해 왔다.

앞으로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TP),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광역 SOC, 산업분야 협력 방안과 지방소멸 위기극복 방안 등을 도출하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계획이다. 또한, 호남권 시·도간 인사 교류, 해외 호남항우들과 소통 강화,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시·도 공연예술단 교류 등 기존 협력과제들도 지속 추진하면서 호남권의 연대 협력사업을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초광역자치단체간 연합이 필요하다"며 "역사적, 문화적으로 맞닿아 있는 호남권이 좀 더 경제분야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해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

기를 바란다"며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모빌리티 등 미래첨단전략 산업 육성에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은 발전전략을 넘어 생존전략이다. 수도권 1극 체계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며 "수도권 1극 체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과 경쟁·발전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전남·전북이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의 성공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지 30년이 되어가지만 지방은 여전히 충분한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소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며 "초광역 SOC, 에너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역사문화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호남권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등 공동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내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미산초 에코시티 부지 이전 확정

학생·학부모 설문 결과 찬성 78.4%

현재 미산초는 향후 분교장으로 운영

전주미산초등학교의 에코시티 내 부지 이전이 확정됐다. 4일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전주미산초 이전 및 분교장 운영을 위한 학생·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8.4%가 찬성했다. 전주미산초 이전 및 분교장 운영 설문조사 선거인수는 학생 45명, 학부모 32명이며, 전날 실시된 찬반투표에는 학생 전원, 학부모 29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3일 오후 12시 50분부터 미산초에서 현장 설문조사 방식 투표에 참여했고, 학부모들은 같은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찬반투표를 했다. 그 결과 학생은 34명, 학부모는 24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020년부터 추진된 예코

시티 내 제3초등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제3초는 총사업비 360억원(교육부 신설교부금 242억원)이 투입돼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현 미산초는 분교장으로 운영된다. 미산초에는 교육과정운영비와 학생복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금으로 10년간 총 6억원이 지원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주 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미산초 구성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전 신설되는 미산초와 분교로 운영될 현 미산초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삼천 벌목 감사 착수

전북자치도 감사위, 8일부터 전주시 대상... 주민감사 청구 수용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전주천과 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도 준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사항과 관련, 오는 8일부터 전주시 감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 연서로 자치단체 행정의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전주시의 전주천·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천준설이 위법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5월에 215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 감사청구 요건 심사를 거쳐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15일 동안 주민감사청구 사항에 대

한 전주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의 청구신청서에 따르면 "전주천 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벗어난 하천정비, 하천관리청의 허가(보고) 없는 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주시에서는 "하도 준설사업은 홍수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벌목은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지장수목에 대해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등에 따라 정비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주시의 주장이 상반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항목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위법·부당 행위 여부와 전주시의 하천 정비사업 적정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

전북교육,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학력 신장

교원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미래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